

# 文대통령, 부동산문제 첫사과... '공급 확대'로 돌파구 모색

### 새해 국정운영 청사진 밝히는 자리서 "송구하다" 밝혀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 '부동산 문제 반드시 풀겠다'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5년차를 맞아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대북 정책 기조와 미중일 등 주요국에 대한 외교 정책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내용은 언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신년사의 큰 뼈대는 '회복', '통합', '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신년 인사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화두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내달 백신 접종

등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실행,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제 등을 적극 추진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쏠리는 건 '통합'이란 키워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언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는데 '통합'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이유로 든 '국민 통합'을 연상시키면서 일각에서 '사면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통합'을 언급한 맥락은 피해계층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뜻하는

취지였다"며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보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면 관련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통합'이란 화두를 제시하더라도, '사면론 시사'가 아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맥락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 담겨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상 및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변'

이 신년사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발관광 등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질적 문제"라고 짚고, 첨단 군사장비 반입, 한미연합훈련 시행 등을 언급하며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신년 인사회 인사말 말미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김 위원장에게 관련 화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등 주요국들에 대한 외교 정책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일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항의하는 등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듬해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 이후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

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분야 관련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은 민생 현안 중 최고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할지 관심이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김종인, 당대당 통합론 일축... "安 입당 아니면 알가알부 말라"

### 당대당 통합, 중도통합정당 등 주장 반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당대당 통합, 중도

통합당의 신설 등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일축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을 압박했다.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안 대표, 더불어민주당과의 3자 구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안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당 일각에서는 중도통합정당론, 당대당 통합 등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힌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 대표와 만나 후보단일화를 넘어서는 야권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볼 계획"이라며 "야권통합이 당대당 통합이 아닌 선거만을 치르기 위한 후보 단일화만 했을 경우는 야권

분열을 잉태하는 나쁜 단일화"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항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 3자 대결 구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조건부 출마선언 등 오 전 시장이 안 대표를 자신의 선거에 끌어드리려는 듯한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선언과 관련해 "그런 출마 선언이 어디에 있나. 왜 안 대표를 끌어들이려 하려고 하느냐. 본인 출마선언만 하면 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오 전 시장이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당대당 통합 등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당대당 통합론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교감에 있었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서도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후보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쏠려진 상태도 아니다"라며 "안 대표가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당으로 들어오든지 (입당)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안 대표나 당내 중진들이 알가알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비대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민주당 서삼석 의원, '좋은 정치인상'



'좋은 정치인상' 수상한 민주당 서삼석(왼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서 선정한 '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사련은 매년 대한민국의 발전·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국

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식량자급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 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등을 지적했다.

또 ▲수산업자급 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의 상이라 더욱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